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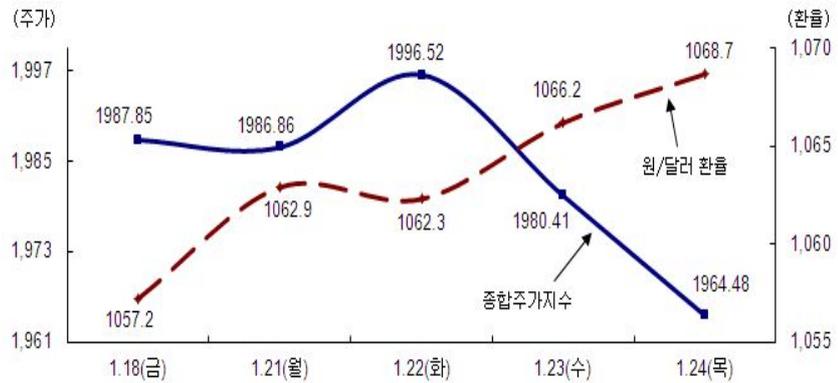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8~1.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크다

#### ■ 새정부 출범과 국민의 기대

새정부는 선거공약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3대 핵심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하였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 ■ 새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

국민 4명 중 3명은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사회문화 분야(12.2%), 통일안보 분야(7.3%), 정치 분야(5.5%)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물가안정(31.2%)과 일자리 창출(26.5%) 의견이 높았으며, 복지확대(9.9%)나 경제민주화(9.8%)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는 51.2% 대 48.8%로 비슷하나, 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 주부,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자산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반면, 20~30대, 임금근로자, 학생은 분배를 중시하고 있다.

#### ■ 새정부의 분야별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성장정책) 국민들은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43.2%로,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률 12.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35.0%)이며,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23.9%), 수출진흥책(20.0%), 소비진작책(16.9%)이 뒤를 잇고 있다. 성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복지 및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복지를 줄이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였다.

(재원조달 가능성) 국민의 60%는 새정부가 제시한 복지재원 조달방식, 즉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세 의향)** 국민의 절반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나, 계층별 격차가 컸다. 남성과 20~30대, 月소득 400~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고자산가, 주부는 낮았다. 납세 의향자의 절반(45.9%)은 소득의 1~3%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6%를 기록하였다. 국민의 대다수(78.9%)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타협(52.0%)을 가장 선호하였고, 노사합의 23.2%,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부채감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부채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나, 반대하는 계층도 존재하였다. 반대 의견이 큰 계층은 50대 이상(53.8% 반대), 月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53.2%), 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자산가(66.1%)였다.

**(부동산대책)** 적극적 부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머물렀으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 37.2%, 시장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 24.7%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국민들의 대다수(69.7%)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 시사점

국민 의견과 새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리더십이 요구된다. **첫째**,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등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이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감면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경협을 확대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1. 새정부 출범과 국민의 기대

- 새정부는 선거공약에서 중산층 비중을 70%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3대 핵심정책으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sup>1)</sup>
  - **경제민주화**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에 확산
    - 정당한 기업활동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
  -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차별 없는 고용시장 구축
    - 이를 위해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 구축
  - **한국형 복지 확대** :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복지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 자립·자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축
  - **기대효과** :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지속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여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
-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새정부가 경제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1) 현대경제연구원(2012.12.21)의 “새정부 경제 정책의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참조

## 2.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음
- 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p임

#### ○ 응답자 특성 : 총 1,010명

####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10명	100%			
성별	남성	50.7	직업별	정규직 근로자	26.4
	여성	49.3		비정규직 근로자	9.9
연령별	20대	23.0		자영업자	23.1
	30대	25.2		주부	21.1
	40대	26.5		학생	13.4
	50대이상	25.2		무직·기타	6.1
지역별	서울	20.7	소득별	200만원 미만	13.3
	인천·경기	27.2		200만원대	19.9
	대전·충청	10.3		300만원대	22.4
	광주·전라	10.7		400만원대	15.8
	부·울·경남	16.2		500만원대	14.3
	대구·경북	10.7		600만원이상	14.2
	기타(강원·제주)	4.2	자산별	1억원 미만	31.0
				1억원~3억원 미만	34.6
		3억원~5억원 미만		18.0	
		5억원~10억원 미만		9.7	
			10억원 이상	6.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 정책 우선순위

○ 국민 대다수는 새정부의 정책 1순위로 단연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사회문화 분야, 통일안보 분야, 정치 분야의 응답률은 매우 낮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새정부가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함
- “귀하께서는 새정부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경제 분야가 75.0%로 압도적임
- 사회문화 분야는 12.2%,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7.3%, 정치 분야는 5.5%임

### <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 >

(%)

	정치	통일안보	경제분야	사회문화
전체	5.5	7.3	75.0	12.2
20대	6.9	9.5	68.1	15.5
30대	3.9	4.3	76.1	15.7
40대	4.9	6.0	81.7	11.2
50대 이상	6.7	9.8	76.9	6.7

○ 국민들은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덜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고 응답
- “다음 경제정책 중에서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물가안정은 31.2%, 일자리창출은 26.5%에 달함
- 뒤를 이어 경제성장 11.8%, 복지확대 9.9%, 경제민주화 9.8%, 부동산활성화 6.4%, 가계부채 연착륙 4.4% 순임

< 경제정책 중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 (%) >

	경제성장	복지확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부동산 활성화	가계부채 연착륙
전체	11.8	9.9	9.8	26.5	31.2	6.4	4.4
20대	9.1	14.2	9.1	27.2	31.9	1.7	6.9
30대	11.0	10.6	11.0	18.4	36.9	6.7	5.5
40대	9.3	9.0	12.7	31.3	26.9	7.1	3.7
50대 이상	17.6	6.3	6.3	29.0	29.4	9.8	1.6

○ 전체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이나, 계층별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50대 이상과 저소득층, 고자산가, 자영업자, 주부는 상대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20~30대와 학생,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분배를 중시
  - 전체 :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성장이라고 답한 국민은 51.2%, 분배는 48.8%로 비슷한 수준
  - 연령별 : 50대 이상(71.9%)은 성장을 더 중시하는 반면, 20대(54.7%)와 30대(61.5%)는 분배를 더 중시
  - 소득수준별 :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60.3%)은 성장을 중시
  - 자산규모별 : 자산이 5~10억원(58.1%), 10억원 이상(67.2%)은 성장을 중시
  - 직업별 : 자영업자(57.1%), 주부(61.8%)는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정규직근로자(58.6%), 비정규직근로자(56.0%), 학생(56.0%)은 분배를 중시

< 성장-분배 중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 의견 (%) >

	성장	분배		성장	분배
전체	51.2	48.8	200만원 미만	60.3	39.3
20대	45.3	54.7	200만원대	51.0	49.0
30대	38.5	61.5	300만원대	51.8	48.2
40대	48.9	51.1	400만원대	47.4	52.6
50대이상	71.9	28.1	500만원대	45.4	54.6
정규직 근로자	41.4	58.6	600만원이상	51.4	48.6
비정규직 근로자	44.0	56.0	1억원 미만	47.7	52.3
자영업자	57.1	42.9	1~3억원 미만	47.9	52.1
주부	61.8	38.2	3~5억원 미만	54.3	45.7
학생	44.0	56.0	5~10억원 미만	58.1	41.9
무직·기타	61.3	38.7	10억원 이상	67.2	32.8

### 3)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

○ (성장) 국민들은 새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보다 높을 것이라고 답함
  -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때와 비교할 때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새정부가 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43.2%로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 12.8%보다 3배 이상 많음
  - 연령이 높을수록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음. 50대 이상은 57.1%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는 37.3%, 20대 이하는 31.5%임
  - 응답자가 객관적으로 5년치 경제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새정부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국민들 중에서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남
  - 성장을 중시하는 국민들 중에서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보다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52.4%로 전체 평균(43.2%)보다 높음

< 새정부 대 이명박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국민 의견 >

	새정부>MB정부	새정부<MB정부	비슷
전체	43.2	12.8	44.0
20대	31.5	15.9	52.6
30대	37.3	12.5	50.2
40대	45.7	10.9	43.4
50대 이상	57.1	12.2	30.7
성장 중시	52.4	9.0	37.6
분배 중시	33.7	15.7	50.6

(%)

○ (성장정책) 새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인 것으로 나타남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답함
- “새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높음
- 뒤를 이어 R&D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23.9%, 수출진흥책 20.0%, 소비진작책 16.9%였으며, 추가적인 성장정책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4.2%에 불과

< 새정부 성장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

(%)

	소비 진작책	투자 활성화	수출 진흥책	R&D투자 등 성장잠재력확충	성장정책 불필요
전체	16.9	35.0	20.0	23.9	4.2
20대	18.9	29.8	20.2	25.4	5.7
30대	24.1	33.2	13.4	24.1	5.1
40대	13.6	42.8	16.7	23.5	3.4
50대 이상	11.2	33.2	30.0	22.8	2.8

○ (복지) 국민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
- “보육, 등록금, 의료 등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9%로 대다수를 차지
-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11.1%,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8.2%,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4.8%를 기록

< 새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

(%)

	대폭 확대	서서히 확대	현수준 유지	축소
전체	11.1	75.9	8.2	4.8
20대	15.5	73.7	7.8	3.0
30대	12.9	75.7	7.8	3.5
40대	10.4	76.5	8.2	4.9
50대 이상	5.9	77.6	9.0	7.5

○ (재원조달 가능성) 국민의 과반은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추가 복지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응답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답함
- “추가 복지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60.0%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 40.0%를 상회

< 새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

(%)

	충분히 가능	가능한 편	불가능한 편	전혀 불가능
전체	19.5	40.5	30.6	9.4
20대	16.8	44.8	30.6	7.8
30대	23.1	38.4	30.2	8.2
40대	20.5	38.1	31.7	9.7
50대 이상	17.3	41.2	29.8	11.8

○ (납세 의향) 국민 중 절반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며, 소득의 1~3%를 내겠다는 응답자가 많음

- 납세 여부 : 남성과 20대, 소득 400~600만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은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과 50대 이상, 저소득층, 고자산가, 주부는 낮음
- 전체 : “귀하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1.0%, 의향이 없다는 49.0%로 비슷
- 성별 : 남성(59.9%)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42.0%)은 낮음
- 연령별 : 20대(58.9%)의 의향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42.0%)은 낮음
- 소득수준별 : 소득 400만원대(57.3%)와 500만원대(55.6%)는 의향이 높은 반면, 소득 200만원 미만(40.2%)은 낮음
- 자산규모별 : 자산 3~5억원(56.0%)은 의향이 높은 반면, 자산 5~10억원(40.9%), 자산 10억원 이상(35.4%)은 낮음
- 직업별 : 정규직근로자(56.2%), 자영업자(56.7%), 학생(60.0%)은 의향이 높은 반면, 주부(32.9%)는 낮음

< 복지 확대를 위한 납세 의향에 대한 국민 의견 >

(%)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51.0	49.0	200만원 미만	40.2	59.8
남성	59.9	40.1	200만원대	52.3	47.7
여성	42.0	58.0	300만원대	51.4	48.6
20대	58.9	41.1	400만원대	57.3	42.7
30대	53.3	46.7	500만원대	55.6	44.4
40대	50.7	49.3	600만원 이상	50.4	49.6
50대 이상	42.0	58.0	정규직	56.2	43.8
1억미만	54.2	45.8	비정규직	52.0	48.0
1~3억	52.7	47.3	자영업	56.7	43.3
3~5억	56.0	44.0	주부	32.9	67.1
5~10억	40.9	59.1	학생	60.0	40.0
10억이상	35.4	64.6	무직기타	50.0	50.0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절반은 소득의 1~3%를 세금으로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세금을 소득의 몇 %까지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3%미만은 45.9%로 절반을 차지

< 복지 확대를 위한 납세 의향에 대한 국민 의견 >

(%)

	의향있음(100%) 中 소득 대비 세금 비중				
	1%미만	1~3%	3~5%	5~10%	10%이상
전체	28.5	45.9	19.3	5.1	1.2
20대	20.6	47.8	25.0	5.1	1.5
30대	31.9	45.2	17.8	3.7	1.5
40대	29.4	43.4	19.9	5.9	1.5
50대 이상	33.3	47.6	13.3	5.7	0.0

○ (대기업규제) 국민들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대기업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단계적 시행’이 ‘급진적 시행’보다 훨씬 더 많음
- 전체 : “귀하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3%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응답자의 34.6%는 ‘사회통합을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한다’를 선택. 현 수준 유지는 8.1%임

< 대기업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

(%)

	급진적 시행	단계적 시행	현수준 유지
전체	34.6	57.3	8.1
20대	34.1	56.0	9.9
30대	44.3	50.6	5.1
40대	37.7	55.6	6.7
50대 이상	22.0	67.1	11.0

○ (동반성장)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대형유통업체 규제 등 동반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이 78.9%에 달함

<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의견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전체	34.9	44.0	16.2	5.0
20대	23.3	49.6	22.4	4.7
30대	42.4	41.2	13.3	3.1
40대	39.6	41.4	12.3	6.7
50대 이상	32.9	44.3	17.6	5.1

○ (비정규직)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노사정 타협을 선호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는 노사정간 타협을 선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노사정간 타협을 통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 52.0%,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23.2%, ‘사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24.8%임
- 정규직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 모두 비슷한 응답률 기록

<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국민 의견 (%) >

	노사정 타협	노사 합의	사측 주도 해결
전체	52.0	23.2	24.8
20대	45.7	28.0	26.3
30대	52.0	21.7	26.4
40대	56.7	18.7	24.6
50대 이상	52.8	25.2	22.0
정규직근로자	52.6	21.8	25.6
비정규직근로자	47.0	26.0	27.0

○ (부채감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부채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나, 반대하는 계층도 존재

- 찬성 비율이 60%로 높은 편이나, 50대 이상, 고소득층, 高자산층에서는 반대자가 더 많음
- 전체 : “귀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0%는 찬성, 40.0%는 반대
- 연령별 : 20대는 76.6%가 찬성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46.2%가 찬성
- 소득별 : 소득 600만원 이상의 찬성률은 46.8%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음
- 자산별 : 자산 10억원 이상(33.8%), 자산 5~10억원(46.8%)의 찬성률도 낮음

< 부채 감면에 대한 국민 의견 >

(%)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60.0	40.0	200만원 미만	60.6	39.4
20대	76.6	23.4	200만원대	66.5	33.5
30대	64.7	35.3	300만원대	62.9	37.1
40대	54.1	45.9	400만원대	61.1	38.9
50대이상	46.2	53.8	500만원대	54.2	45.8
정규직 근로자	57.9	42.1	600만원이상	46.8	53.2
비정규직 근로자	63.0	37.0	1억원 미만	71.1	28.9
자영업자	49.8	50.2	1~3억원 미만	60.6	39.4
주부	58.7	41.3	3~5억원 미만	54.3	45.7
학생	84.3	15.7	5~10억원 미만	46.9	53.1
무직·기타	53.2	46.8	10억원 이상	33.9	66.1

○ (부동산) 부동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응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

- 성·연령·지역·소득·직업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시장에 맡기거나 시장 동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37.2%, ‘부동산 시장 동향을 더 지켜와야 한다’는 34.7%임
- 자산규모별 : 자산 10억원 이상은 ‘적극 부양’이 41.5%로 전체 평균(28.1%)을 크게 상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

(%)

		적극 부양	시장동향 지켜보아야	시장에 맡겨야
전체		28.1	24.7	37.2
연령	20대	26.7	49.1	24.1
	30대	30.6	36.5	32.9
	40대	25.8	29.2	44.9
	50대 이상	29.1	25.6	45.3
자산 규모	1억원 미만	29.0	37.7	33.3
	1억~3억원 미만	24.7	41.7	33.6
	3억~5억원 미만	27.0	27.0	46.0
	5억~10억원 미만	21.3	30.9	47.9
	10억원 이상	41.5	15.4	43.0

○ (남북경협) 국민들의 대다수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 성·연령·지역·소득·자산·직업에 상관없이 국민 대다수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귀하는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 69.7%, 반대 30.3%임

<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 의견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전체	17.4	52.3	23.0	7.3
20대	14.2	49.6	25.4	10.8
30대	18.4	50.6	24.7	6.3
40대	22.9	55.3	18.0	3.8
50대 이상	13.3	53.3	24.3	9.0

### 3. 시사점

- 국민 의견과 새정부 공약의 일치도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세심한 접근과 통합 리더십이 요구됨
  - 정책우선순위 :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등 경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
    - 중산층 복원을 위한 3대 핵심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놓고 경제 민주화 및 한국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
  - 성장정책 :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R&D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마련
    - 국민들은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하고 있음
  - 복지과 재정건전성 :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하고, 자원 조달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
  - 경제민주화 :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 부채 감면 : 국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감면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부채 탕감이 시행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 우려
  - 남북경협 :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2.1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2
일본	-0.8	-7.3	-2.8	10.4	0.3	2.2	5.7	-0.1	-3.5	1.2
중국	9.2	9.7	9.5	9.1	8.9	7.8	8.1	7.6	7.4	8.2

주: 1)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11일	1월 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87	1.88	0.01%p
	엔/달러	77.66	79.37	85.86	88.91	88.61	-0.30¥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267	1.3290	0.0023\$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488	13,596	108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0,802	10,610	-19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6	2.73	-0.03%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54.7	1,058.1	3.4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96.7	1,974.3	-22.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11일	1월 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3.61	95.42	1.81\$
	Dubai	104.89	92.89	107.99	107.81	106.47	-1.3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6.66	300.33	3.6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72*	410**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10	175	285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30	5,481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5	-3.0	-1.3	5.6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68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6.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